‘반쪽’ 6월 국회서도 여야 갈등 격화

민주 “여야 4당 공조로 정개·사개특위 연장”
한국 “무효된 합의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

‘반쪽’ 6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이어진 27일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여전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8일 국회 본회의 진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28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체가 필요한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자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만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예결위 구성은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미합의 처리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는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한국당의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조정식 정책위의장), “전례도 없는 황당한 발언”(고용진 의원) 등의 비판 발언도 잇따랐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두 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주말(29일)과 휴일(30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28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 못 하게 방해하는 여당, 사실상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에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큰 틀에서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도 대여 공세가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백지 등원’ 의견도 당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안대로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와 모든 일이 올스톱돼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심포지엄서 만난 이인영-나경원 가까스로 도출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2시간도 안돼 뒤집어지는 등 당내 의원들에 의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한뒤 자리를 먼저 떠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균형위-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광산구 ‘공기질 관제기술’·완도군 ‘블루존 조성’ 선정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해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광주시 광산구-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삶의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 ▲완도군-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등 전국적으로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서삼석·송갑석·주승용·정인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서삼석

송갑석

주승용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구례·곡성)은 지난 26일 지방자치TV 주최로 열린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우수천일염인증품 소비촉진,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 등 농어촌과 밀접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송 의원은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과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현안에 대해 예리한 지적과 더불어 건설적 대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초선 못지않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20대 국회에서 총 148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63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우수한 법안 발의 성적을 보여준 점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해온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대안으로서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역설했고, 같은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이·통장 처우개선을 주장하여 수당 인상에 기여했다. /김진수 기자

文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靑 새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26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의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김 신임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사비서관으로 권용일(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권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 사법고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합류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민주, 공천룰 당원 찬반투표 진행

12만명 이상 투표해야 유효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기 위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공천룰 확정 과정에 모든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당원 플랫폼을 통한 상향식 시스템 공천’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권리당원들은 투표 기간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와 7월1일 중앙위원회 결과를 50%씩 반영해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권리당원 2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 결과가 효력을 얻는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은 60만명 가량으로, 12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다.

투표가 무효가 되더라도 중앙위원회 결과를 100% 반영해 특별당규를 확정하므로 공천룰 결정에는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 /김진수 기자